

파주시 'DMZ 출입 유엔사 승인 절차 개선 필요' 건의

등록 2020-11-17 17:44:17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는 이재강 평화부지사(사진 = 경기도 북부청 제공)

[파주=뉴스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비무장지대(DMZ)에 속하는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등 안보관광구역에서의 지자체 주관 행사와 시설물 유지보수 행위를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17일 파주시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파주지역 DMZ 평화관광지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에 따라 안보견학 이외의 활동은 유엔사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표적인 DMZ 평화관광지인 도라전망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도라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 절차에 막힌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인 피켓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사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9월 말 국방부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엔사의 비무장 지대 출입 허가 여부 결정과 관한 유권해석이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이 군사적인 것에만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정전협정 상에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회신했다.

유엔사의 권한에 관한 논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지자체에도 명분이 생긴 셈이다.

한해 파주지역 비무장지대에서 열리는 민·관 주최 행사는 100여건 이상으로, 올해는 아프리카돼지 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달까지 관광 자체가 중단돼 행사가 거의 없었지만 매년 각종 공연과 스포츠행사 등 적지 않은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가 주최 측으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은 뒤 유엔사 승인을 받는 과정을 대행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행위가 유엔사 통제 하에 있다는 점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직·간접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시는 현재 도라전망대에서 진행 중인 북측 예술가 그림전시회 개막에 맞춰 작가들을 초청해 테이프 커팅 행사를 진행하려다 승인 거부를 우려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유엔군사령부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관련 규정 중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보견학 이외의 활동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견학시설 실내 문화행사, 안보관광 시설물의 직접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활동'을 제외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유엔사의 승인 절차와 별도로 신청 행사에 대해 작전영향성 검토를 진행하는 만큼 완화돼도 관할 비무장지대 경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엔사의 경우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국방부의 유엔사 승인대상 범주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건의가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라전망대는 한해 수십만명이 방문하는 관광지인데 행사 때마다 유엔사의 승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